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전략 모색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제4차 토론회

정동영 의원 "적대 대신 국익·평화공존 전략 추구해야"

위성락 의원 "한미일 협력 발전시키되 북중러도 전략 관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평화전략'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종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장, 김기정 전 국가안전보장회의장, 김희교 광운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최재덕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등 국제정세의 급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기정 전 국가안전보장회의장 원장이 발제를 맡고, 김희교 광운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최재덕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토론을 맡아 트럼프 2기 시대에 동북아 지정학의 중심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가치동맹전략을 폐기하고 철저하게 힘에 의한 질서, 보호주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향될 것"이라며 "우리는 최우선적인 국익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공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안보외교라인의

전면체신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국 외교안보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안보 위기이자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적 실익과 현실적 타협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김문수 의원은 축사에서 "미국 우선 대외정책 기조하에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반면 "지난 30년 간 모색해왔던 위상이 통탄할 정도로 퇴색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렇듯 미국과 북한의 변화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및 남북관계에 불균형을 미칠 수도 있거나 냉전체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간사인 위성락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통일 추구는 우리의 고유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되, 동시에 북·중·러와의 관계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전략'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정 교수는 "트럼프 2기 시대의 한반도는 동맹유지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북미교섭 가는 길과 현상유지 혹은 대립질서가 굳어지는 두 가지 경로가 열려있다"고 보았다. 한반도 평화 없이 동북아 지역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전제 아래 국회가 평화 공공외교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로 나선 김희교 교수는 "중국은 북·중·러 동맹체제는 적극적으로 피하고 북·중·중·러 양 관계 심화를 추진할 것이며, 남한과는 공적외교와 별도로 장기적 우호관계 형성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외교와 민간외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

다"고 보았다.

최재덕 교수는 "한국은 비우호적인 전략환경에서도 중국·러시아와 양자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러시아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에 투사되면 북한이 더 힘을 얻어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보았다.

좌장을 맡은 이종석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북미대화 추진을 준비해야 하며 국회가 나서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욱기기자



"제대로 된 호봉제, 처우개선 예산편성"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호봉제, 처우개선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부동산 본질 파악... 특성화된 도시발전전략 필요"

전북 백년포럼 제19강

전북지역 부동산은 가격변동폭이 적는데다 자가점유율이 높아 내수기반 특성과 발전전략을 세워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네 북독방' 이광수 대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19강 '한국부동산 미래와 지역 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란 주제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라며 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전북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과 특성화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

동에 주목하며 경제·금융·정책 등의 역사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그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중요하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며, '때'가 아니라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지 말고,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충족될 때 행동하여 기회를 잡아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라며, "전북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적으며 자가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내수 기반 특성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포럼의 특강을 맡은 이광수 대표는 GS건설 재경본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이만호 기자

"함께 해달라"... 전북 시민사회단체들, 정권퇴진 대회 참가 호소

尹정권 퇴진 3차 총궐기 7일 서울 경복궁 일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준)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법국민대회)에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민주노총과 각종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 사회 대전환! 세상을 바꾸는 퇴진광장을 열자!"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법국민대회)에 전북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민주노총 광송용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파편을 선언한다."며,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의 거대한 마라카스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통령 부부와 수많은 정치인이 얽혀있는 썩은 내가 펄펄 풍기는 공천거래 부정부패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게 나라냐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경은 기어이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말하며, "늪이 맹수를 피해 모

래 속에 머리를 바고 현실을 도피하듯 정권은 국정농단의 진실에도 자신의 치부만 가리면 된다는 듯 거부권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뿐"이라며,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의혹도, 억울하게 죽은 채상병의 사망원인 등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부채와 살림살이도, 한반도로 확산되고 있는 전쟁 위기도,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에 노동권을 억압받는 노동자도, 쌀값 폭락에 자신의 생존권을 위치는 농민도, 추운 겨울 더욱 추운 거리로 내몰리는 빈민의 삶도 그 무엇보다 변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는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멈춰 섰던 검찰 공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대중조직과 시민 사회 단체에게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인다"며, "2015년 경찰 물대포에 쏘였던 백남기 농민이 2016년 천만 촛불로 살아났듯, 성난 민중들의 항쟁의 열기는 탄압으로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16년 촛불이 이어 1년 전 거리로 나선 민중들의 총궐기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이 밀알이 되고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 총궐기가 퇴진 촛불, 퇴진광장을 열어내게 될 것"이라며, "이미 노동자와 농민이 앞장서고 전국의 양심 있는 교수님들과 종교인 대학 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함께 나서고 있다. 도민들은 오는 12월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는 퇴진버스에 타고 서울로 모여 거대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관계자들이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법국민대회 전북지역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항쟁의 봉화를 올려 달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준)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먼저 결심하고 각계각층으로 제안해 결성된 연대기구이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함께 하는 단체는 69개 단체이며, 윤석열 정권 퇴진에 동의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 타파와 노동 민중 민주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전국 차원의 연대기구"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참 관찰은 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3일,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 상반기 '참 관찰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매일방송(MBN)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참 관찰은 의원상'은 입법과 민생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참 관찰은 의원상'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장성·광진을)·서영교(서울을 중랑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및 켐비리 과행의 원인을 규명하여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만호 기자

"전북 K-POP 아카데미 시급성이 적어보인다"

도의회 예결특위, 문화체육관광국 등 대상 예산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3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전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핵심적 시스템 구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가 문화예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황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주 모악가요제와 전국 민주시민 합창 축전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 주관 행사인데도, 도에서 지원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시급성이 적어 보이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홍보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중점사업으로 만들어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예산이 전주시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데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양도소득세율 경감

민주 윤준병 의원,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의 핵심과제로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단기 빈집정비제도 개편에 이어 오는 제22대 국회도 개선으로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민주 한병도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3일,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 운영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고령층의 경로당 급식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유무와 형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고, 지난 8월에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 대해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복지를 두텁게 마련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